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이재강 · 윤종오 · 김준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292호)

2025. 11.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4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4
2. 주요 내용 검토	5

I. 제안 및 회부

가. 제 안 자 : 이재강·윤종오·김준형의원 등 65인

나. 제안일자 : 2025년 9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1.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하여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결코 일방적 강요를 받아야 할 관계가 아니다.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무시한 처사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 투자 강요, 무역 제한 등 일방적 경제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흔들고 동맹국들조차 불안정하게 만들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 또한 단순한 인권 침해 사건을 넘어, 미국의 일방주의가 불러온 폐해라 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근무하던 한국 노동자들이 이유 없이 구금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것은,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일방적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 동맹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는 현실에 국민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과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낳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진정한 상호존중 위에 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미동맹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동맹관계를 존중하며, 앞으로도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질서와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정되고 성숙해져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진정한 상호존중과 균형에 기초한 동맹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합리한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 △조지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양국 관계가 진정으로 상호 호혜적이고 존중받는 동맹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발의 배경

이재강의원·윤종오의원·김준형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은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조지아주에서 한국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양국 간 파트너십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 행위에 대해, 미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여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투자 규모와 조선 등 전략산업 투자 분야¹⁾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후 금융패키지 이행 등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 측이 3,500억 달러 중 상당 금액의 현금 투자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의 민감성 및 미측 요구 수용 거부 시 관세 협의 실패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음.

이어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 317명을 포함하여 총 475명이 체포되는

1) - 조선 1,500억불 +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2,000억불
- 미측은 행정명령(7.31)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15% 인하 발효(8.7~)

사건이 발생²⁾하였음.

이 사건은 우리 기업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미국 내 집단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음.

이에 동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과도한 투자 요구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한미 간 동등하고 상호존중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검토

결의안은 ① 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 철회, ②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의 신속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③ 대한민국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④ 국회의 향후 불공정한 대외 요구와 인권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투명한 논의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총 4개의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2) 9.5(금) 오전 미측 관계기관(HSI, ICE 등) 합동으로 아래 요지 발표

- 이번 단속은 대규모 불법고용 및 노동력 착취, 경제질서 훼손, 중대 연방법 위반에 대한 대응
-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개월간 다수의 내부자 및 지역사회 신고 등 증거 확보 후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 HSI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내 단일 사업장에 대한 단속
- 총 475명 체포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HL-GA 및 23차 협력업체 소속)
- 불법체류, 불법입국, ESTA로 근로, 비자 체류기간 초과 등 사유 다양

＜결의안의 주요내용＞

주 문	주요 내용
안 제1호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
안 제2호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
안 제3호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
안 제4호	대한민국 국회는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협하는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 함께 투명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결의

1)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촉구 관련

7월 30일 합의 이후 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미 투자 MOU와 관련하여 미-일 MOU와 동일한 문안 수용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측은 대출·보증 허용, 외환시장 안정화 장치, 상업적 합리성 반영 등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양국간 합의를 도출³⁾하였음.

결의안 주문 제1호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기업과 경제에 실질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 정부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하

3) < 전략적 투자 MOU 기본구성 >

- 美 주도 투자(2,000억불) + 조선협력투자(1,500억불)
 - (투자) 당초 3,500억불에서 2,000억불로 규모 축소(43%)
 - (조선협력투자) 조선 FDI, 대출 보증, 선박금융 등 1,500억불
- 美는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다만, 이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대략적인 협상안이 도출된 상황으로,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주장은 시의성과 정책적 적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한·미 간 협상이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의안의 내용이 향후 협상 과정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정부(산업통상부)는 현재 한미 간 관세협상이 긴밀하게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보다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합의 도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 관련

결의안 주문 제2호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9월 4일 구금된 근로자들 다수는 ESTA 또는 B-1⁴⁾ 비자를 소지하

4) B-1 비자는 원칙적으로 작업현장 내외에서 현장 건설노무(building or construction work)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미국 내 고용계약 체결이나 임금지불을 전제로 한 근로활동에는 사용 불가

고 있었으며, B-1 비자로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와 같은 기술적 활동이 허용되며, ESTA 소지자도 B-1 활동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함.⁵⁾

외교부는 조지아주 공장 관련 사례는 이러한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미국 현장 당국의 해석과 우리 기업의 이해 간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함.

외교부는 사건 발생 즉시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하고 구급시설 면담, 영사조력, 전세기 귀국 지원 등 총력 대응을 실시하였으며, 9월 12일 현지 체류를 희망한 1인⁶⁾을 제외한 구급자 전원이 귀국하였음.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건으

5) < 우리 對美 진출 기업 활용 비자 >

구분	요건	한국인 발급수*		비 고
		2023년	2024년	
ESTA	90일 이내 관광·상용 목적 방문	n.a	n.a	■ 근로(labor) 목적 이용 불가
B-1	비취업 활동(협상, 단기훈련, 회의 참석, 해외장비 설치·유지관리 등)	9,202	15,507	■ 단기파견 인력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 ■ 산업용 장비·기계의 설치, 작동, 보수 및 현지 직원 교육 등의 작업 수행 가능 - 단, 건설작업 수행은 불가 / 미국 내 사업체에서 급여 수령 불가(규정)
E-2	對美투자 기업 채용 및 근무	6,640	6,778	■ 미국 투자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을 투자했거나 투자 과정을 적극 진행 중일 경우 활용 가능
L-1	對美투자 기업 동일 계열사 직원	2,767	2,996	■ 미국 투자 기업의 동일 계열사 직원 전근 시 활용 - 주재원·간부/전문지식 직원 대상
H-1B	학사 또는 동등한 전문성 / 취업예정 주에서 즉시 종사할 권한(면허·등록·자격증) 획득	2,243	2,289	■ IT, 의학, 금융 등 전문직 분야 서비스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할 경우 활용 가능 ■ 추첨 선발(총 8.5만 쿼터)
H-2B	농업외 일시적 수요에 따른 임시 근로자	127	16	■ 임시적/계절적 피크 수요 및 간헐적 필요에 따른 비농업 업무 수행 ■ 총 6.6만 쿼터

* 미 국무부 영사국 통계 (미국 회계연도 FY2024 기준 : 2023.10.1.~2024.9.30.)

6) ○ 9.11(목) 전세기 애틀랜타 공항 출발(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탑승)

○ 9.12(금) 전세기 인천공항 도착

- 현지 잔류를 희망한 우리 국민 1명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하였으며, 9월 말 법원의 보석 결정 후 석방되었음.

로, 미국 정부에 신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주문 제2호는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와 해외 근로자의 권익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음.

또한, 단기과건 근로자에 대한 비자 규정 해석의 불명확성과 미 측의 통상환경이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도 동 결의안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해외 근로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다만, 구금자 전원이 이미 귀국하고 사건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결의안이 요구하는 ‘신속한 해결’의 실질적 효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 사안은 미국의 이민법과 비자 제도 운용 등 내정적 요소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외교부)는 향후 미국 현지에서 이와 같은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 투자 기업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단속 대비 조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며, 공관과 기업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함.

또한 ICE 등 미국 관계 당국과의 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하여 추가 단속 동향을 확인하고, 주정부·의회·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등과 적극 교섭함으로써 우리 기업 인력의 구금 재발을 방지하며, 투자 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과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체계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3) 국민경제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 촉구 및 국회의 결의 관련

결의안 주문 제3호와 제4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회가 향후에도 불공정한 대외 요구나 인권침해에 대응하며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결의안은 한미투자 MOU 및 조지아주 구금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경제의 안정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국민경제의 안정과 재외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책무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결의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문 의 처
02) 6788-5266